

Today's News Clip

오늘의 주요기사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목 차

江原日報		[포토뉴스]2023 경포 등축제[1/2]	1
江原日報	03면	"국회는 민생부터 살피라" 싸늘한 추석민심	2
강원도민일보	15면	백일홍 가득핀 평창서 아리랑·퓨전국악 진수 선보여	3
江原日報	03면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4
江原日報	16면	시골벽적 전통시장 만들기 ‘청년마루’	4
강원도민일보	20면	철원군 용인대 태권도대회 유치 협약	4
강원도민일보	07면	"학교 설립 명확한 방향성과 도민 행복·지역경제 도움에 초...	5
江原日報	10면	FIBA 3x3 흥천챌린저 2023	5
江原日報		김진태 지사.원강수 시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1/2]	6
철원신문		제27회 노인의 날 및 제4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8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0
강원도민일보	10면	[동정] 박호균(강릉) 도의원	10
江原日報	01면	무상 교복·친환경 급식 지자체 지원금 끊길 판	11
江原日報	03면	무상 교복·친환경 급식 지자체 지원금 끊길 판	11
강원도민일보	02면	'황금연휴 호재' 산림엑스포 관람객 42만명 돌파 흥행몰이	12
江原日報	05면	감사원 “딸 취업위해 채용 늘려” 검찰에 전 평창군수 수사 ...	13
강원도민일보	10면	원주시, 전국적 재정위기 돌파 고삐 당긴다	14
강원도민일보	13면	평창 천만송이 백일홍축제 10만명 방문 호평	14
강원도민일보	14면	황성한우축제 규모·프로그램 '업그레이드'	15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내년 사업 민생에 활력 중점을	16
강원도민일보	19면	[사설] 동해항 자유무역지구 지정돼야	17
江原日報	19면	[사설] 여야 민생 살리기,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18
江原日報	19면	[사설] 2050년 도민 2명 중 1명 노인, 고령화 대책 마련해...	19

江原日報

[포토뉴스]2023 경포 등축제



2023 경포 등축제 개막식이 지난 28일 강릉경포습지광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경포 등축제 개막식이 지난 28일 강릉경포습지광장에서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기영 강릉시의장, 퇴우 정념 월정사 주지 스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경포 등축제 개막식이 지난 28일 강릉경포습지광장에서 열려 시민 관광객들이 오색 연등 아래에서 추억을 남기고 있다. 강릉=권태명기자

2023 10 04 ()

江原日報

03

“국회는 민생부터 살피라” 싸늘한 추석민심



◇박정하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 윤미경 국민의힘 도당 사무처장, 김기홍 도의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을 비롯한 춘천시의원들은 지난달 27일 춘천역을 비롯한 주요 당직자들은 지난달 28일 원주 자유시장을 찾아 장보기 행사를 진행했다. 남춘천역을 찾아 역귀성에 나서는 시민들을 만났다.

추석 명절 정치권에 대한 강원지역 민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싸늘했다. 여야 모두 연일 정쟁에만 몰두하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나아질 줄 모르는 경기 침체를 살피지 않고 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힘을 모아 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국회서 경제 대책 마련해야” =국민의힘 박정하(원주갑) 강원특별자치도당위원장은 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연휴 때 전통시장에서 민주당 송기현 의원을 만나 반갑게 인사했는데 이를 본 상인들이 ‘지역에선 사이좋은데 왜 국회만 가면 여야가 싸우냐고 하셨다’며 ‘대체적으로 경제가 심각하게 어려운데 국회는 싸움만 한다는 지적이 컸다’고 말했다.

접경지역을 지역구로 둔 같은 당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회 국방위원장은 “먹고살기 힘들어서 대책이 필요한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주길 바란다는 바람이 컸다”고

의원들 고향서 민심 청취 “여야 정쟁에만 몰두” 쓴소리 잇따라 與 “이재명 구속됐어야” 野 “영장기각 당연” 지지자 반응 엇갈려

전했다. 이와 함께 포천-철원 고속도로 연장, 춘천 소양8교 등 지역별 현안사업 조기 추진 당부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이양수(속초-인제-고성-양양) 원내수석부대표는 “추석 대목은 옛말이 되어버린 분위기다.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면서 경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도 “일반 소비자들은 물가가 올라서 장보기 무섭고, 그러다 보니 지갑이 닫혀서 대목을 누리는 상인들도 사라졌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 엇갈린 반응=특히 이번 명절의 최대 화두는 추석 연휴 전날인 지난달 27

일 결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이었다. 이를 두고 정당별 지지자들의 평가는 갈렸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사무총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 분노가 들끓었다”고 했다. 한기호 의원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고 말했다. 이양수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당대표에서 물러나야 민주당도 본연의 민생정당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다”고 전했다. 노용호(비례-춘천갑당협위원장) 국회의원도 “이재명 당대표를 왜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는냐는 시민들의 분노가 컸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기현(원주

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다행이라는 반응이 많았다”면서 “국민의힘이 아니라 일본의 힘으로 당명을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있었다”고 상반된 목소리를 전달했다. 허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은 당연한 것이라는 반응이 압도적”이라며 “현 정부가 야당과 협력하지 않는다는 질타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김우영 자치도당위원장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대표의 단식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가결표가 나온 것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하늘·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9 28 ()

15

백일홍 가득핀 평창서 아리랑·퓨전국악 진수 선보여

본지 주관 아리랑 페스티벌 성황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 등 무대
“전통 아리랑 계승에 도움되길”

강원도민일보가 주관한 2023 아리랑 페스티벌 평창공연이 27일 오후 평창 백일홍축제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져 전통국악과 국내 3대 아리랑,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룬 퓨전국악의 진수를 선보였다.

이날 공연은 지난해 열린 JTBC 예능 프로그램 ‘풍류대장-힙합 소리꾼들의 전쟁’에 출연, 큰 인기를 모았던 최재구 씨가 진행을 맡아도 무형문화제 제 15-1호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의 농악과 평창아리랑보존회의 평창아리랑 공연



본사 주관 2023 아리랑 페스티벌 평창공연이 27일 오후 평창백일홍축제 특설무대에서 열려 평창둔전평농악보존회가 개막공연을 펼치고 있다. 신현태

에 이어 최재구 씨가 신명과 익살 넘치는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 전통퓨전뮤직그룹 ‘The 감’이 전통 국악을 현대화 한 특색있는 공연

을 펼쳤고 국내 3대 아리랑인 밀양, 진도, 정선아리랑의 청년전승자인 김주연, 박두리, 유은서 씨가 각각 아리랑의 진수를 들려줬다.

또 월드뮤직밴드 ‘도시’가 무대에 올

라 전통국악에 현대음악을 가미한 흥과 멋이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고 피날레 무대로 출연진과 관객들이 함께 어울어지는 풍류 한마당이 펼쳐졌다.

이날 공연에는 심재국 군수, 심현정 군의장과 군의원, 지광천 도의원, 정장호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형진 평창백일홍축제위원장을 비롯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석, 천만송이 백일홍을 배경으로 아리랑과 국악의 향연을 즐겼다.

개회식에서 심재국 군수는 “우리민족은 어렵고 힘들 때 아리랑과 농악으로 고난을 극복해왔다”며 “오늘 페스티벌이 전통 아리랑의 맥을 계승하고 지역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현태

2023 10 04 ()

江原日報

03

대상포진 사백신 지원 조례안 발의

이지영 자치도의원
65세 이상 도민 대상



장기이식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는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유전자재조합 사백신 접종만을 권고 받지만

이지영(더불어민주당·비례·사진)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이 도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사백신’을 지원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발의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대다수 지자체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지원 백신을 생백신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65세 이상 강원자치도민이 유전자재조합 백신인 대상포진 사백신을 2회 접종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대한감염학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 환자나

이지영 의원은 “조례를 통해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제대로 지원돼 대상포진 질환으로부터 어르신들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현정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10 04 ()

20

철원군 용인대 태권도대회 유치 협약

2023 10 04 ()

江原日報

16



시골벽적 전통시장 만들기 ‘청년마루’ 화천청년소상공인협회(회장:이종원)가 마련한 시골벽적 전통시장 만들기 ‘청년마루’ 행사가 지난달 27일 화천5일장 주차장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노이업 군의장, 박대현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철원군은 스포츠분야대외협력증진을 위해 용인대와 전국태권도대회를 3년간 유치하기로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용인대 총장배 전국태권도대회는 2020년부터 4년째 개최된 대회로 철원군 스포츠마케팅 사업의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고 있다.

이번 협약에는 이현종 철원군수와 한진수 용인대 총장, 임대수 철원군체육회장, 김정수 도의원 등이 참석해 향후 철원군에서 개최되는 대회 및 상호 증진 협력을 통한 우수한 인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했다. 이재용

강원도민일보

토론

“학교 설립 명확한 방향성과 도민 행복·지역경제 도움에 초점을”

◇좌장

△이영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토론자

△박재모 제주국제자유개발도시센터 면세사업처장 △노대욱 전갈반메니토바 대표이사 △김재금 광운대 교수 △신철균 강원대 교수 △김상영 강원특별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 △구철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사



이영욱

박재모

노대욱

김재금

신철균

김상영

구철진

**귀족학교 논란·저출생 여파 등
도내 국제학교 설립 난관 예상
교육부 인가 설득 전략적 방안
초기 자본·재정 자립 고민해야**

**수업료 인하·교육혜택 확대 등
도민 수용 가능 모델 제시 필요
교육청 관련 연구용역 준비 중
강원도 교육환경 악화 현실 속
글로벌 인재 요람 구축안 중요**

허가를 받기 때문에, 인허가 신청자 입장에선 굉장한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 지자체나 교육청의 재정 지원이 없으면 순수한 학비에 의존해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외국학교 교육 수요는 충분하게 있을 수 있지만, 학교가 설립돼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재정 운영의 자립도가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국제학교가 운영에 들어갈 때까지,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을 누군가 담당해야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다.”

△김재금=“국제학교는 지난 2010년

무렵 정부 주도로 설립을 추진했다. 당시 조기 유학 수요를 국내에서 흡수하기 위해 제주도에 4개 국제학교가 설립됐다. 국제학교는 우수한 시설과 특별한 교육 과정으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 재벌과 연예인 등 돈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었다. 강원도 또한 강원특별법을 통해 국제학교를 추진하려 했는데 교육부 반대로 불발됐다. 교육부가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귀족학교 논란, 국제학교의 전국 확산에 대한 우려다. 또, 저출생 등 국제 교육 수요가 10년, 20년 전과 비교해 현격하게 줄어든 상황도 반대 근거로 내세운다. 현재 교육부가 국제학교 설립을 쉽게 동의할 수 없기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공공교육기관에서 국제 교육 수요를 일부 담당할 수도 있다. 강원도의 장점을 취할 수 있고, 강원도민이 수용할 수 있는 형태의 모델을 만들어 접근해야 한다.”

△신철균=“그동안 한국은 중앙집권적 구조를 통해 산업화와 교육 발전을 이뤄왔으나 이젠, 행정 분권뿐만 아니라 교육의 분권을 통해서 지역과 학교의 자율성, 역량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국제학교 방향성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학교가 공공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에 기여할 것인가, 아니면 저해할 것인가를 따져봐야 한다. 공공교육은 학

생이 한 사회 시민으로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주제로 교육하고, 특기 적성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돕는다. 교육 격차 완화 등도 공공교육이 담당한다. 현재 국제학교에 대한 논의가 이러한 부분을 얼마나 검토하고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국제학교 예산 적자도 따져봐야 한다. 국제학교는 단순히 기업이 투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투자를 하고 상당한 세금이 들어간다. 또, 교육에 대한 수요가 정지적 수요가 아닐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은 공공교육과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김상영=“현행 강원특별법에는 교육 자율성 관련 4-5개 조항이 들어가 있다. 다만 국제 학교 설립은 제외됐다. 국제학교는 지난 2006년 제주도 사례를 참고했는데, 우리 강원도에 적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제주도는 특별법을 통해 480여개 조문을 확보했지만 50%가량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학교 설립은 강원도민이 행복하고 강원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 초점을 맞춰야 한다. 지난 2차 개정 때 교육과정의 권한을 일부 가져왔다. 내년 6월부터 학제를 일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국제학교 또한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동기 부여하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공공학교에서 국제학부를 도입하고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

하는 방법도 시도할 수 있다.”
△구철진=“강원형 자율학교, 농어촌 유학 등 현행 강원특별법에 반영된 교육 특례는 강원도가 교육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 3차 개정안에서는 초·중·고 통합 공동교육과정, 교육자치권 등을 비롯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을 위한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국제학교는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수업료다. 일반 자사고가 최소 800만 원 정도인데, 국제학교는 2500만원에 육박한다. 강원도에서 지원이나, 운영 방안에 있어 높은 수업료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업료를 낮추고, 더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입학 정원 또한, 강원도 학생 비율 외에도 다문화, 저소득층 자녀의 비율 등도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교육청에선 도내 학생들과 도민들이 원하는 국제학교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다. 강원형 국제학교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

△이영욱=“강원형 국제학교 설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는 공공교육이다. 국제학교가 공공교육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하느냐, 아니면 별도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국내 국제학교 교육 수요는 있다고 평가한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면서 국제학교가 학생들을 외국인 학생처럼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교육환경은 이미 서울 강남에서 조기 정착됐고, 전국 단위 국제학교로 자리매김했다. 강원도 교육 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학교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중점을 뒤야 한다. 이러한 제도를 마련한 뒤 공공교육과의 상생 방안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정리/김덕형

江原日報



FIBA 3x3 흥천챌린저 2023 ‘FIBA 3x3 흥천챌린저 2023’이 지난 2일 흥천 K컨벤션웨딩홀 특설링크에서 신영재 흥천군수, 박영록 흥천군의회장, 이영욱·흥성기 도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23 09 27 ()

江原日報

김진태 지사.원강수 시장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민속풍물시장 일원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 상인회 동참
 물가안정.농수산물 소비촉진.불공정 상행위 방지 호소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이 27일 원주 민속풍물시장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원주소비자시민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허남윤기자

"풍요로운 추석 명절 맞이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는 민속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27일 오후 민속풍물시장 일원에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박길선 강원자치도의회 교육위원장, 원제용.하석균 도의원, 시의원, 강원자치도.원주시 공무원,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원주 소비자시민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캠페인은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와 최근 수산물 소비 위축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역 상인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특히 일본 핵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통시장 판매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독려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이 27일 원주 민속풍물시장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허남윤기자

참석자들은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과 식재료의 가격 급등을 우려해 캠페인을 통해 합리적 소비 생활과 불공정 상행위 방지 등에 대한 동참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장바구니 2,000개를 나눠준데 이어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원주사랑상품권 사용과 착한가격업소 이용을 독려했다.

김진태 지사는 "물가가 고공비행을 하는 상황에서 전통시장에서의 합리적 소비를 도모하기 위해 캠페인에 참여했다. 상인과 강원자치도민 모두 풍요로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이 27일 원주 민속풍물시장 일원에서 김진태 강원자치도 지사와 원강수 원주시장, 지역 전통시장 상인회, 원주소비자시민모임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주=허남윤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통시장에서 파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은 확실히 보증한다. 추석 장보기는 전통시장을 찾아달라"고 당부했다.

원주소비자시민모임은 지난 19일 실시한 추석맞이 물가조사 결과를 토대로 가격 정보를 제공, 시민들의 합리적인 명절 장보기를 돕는데 발 벗고 나섰다.

시도 매주 1회 물가모니터요원이 대형상점, 시장가 등에서 물가조사를 통해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문화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매주 강원물가정보망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격동향 정보를 알리고 있다.

2023 09 27 ()

제27회 노인의 날 및 제4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개최



제27회 노인의 날 및 제4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26일 철원군 실내체육관에서 내빈들과 6개 읍면 분회장, 경로당 회장, 그리고 많은 어르신을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큰 성황을 이루며 개최됐다.

이날 본격적인 기념식에 앞서 식전 행사로 모듬북, 부채춤 공연이 펼쳐졌다.

기념식 사회는 (사)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신광수 사무국장이 담당하였다. 기념식은 먼저 국민의례, 내빈 소개, 정만식 철원군 노인 대학장의 경로현장 낭독, 한기호 국회의원 축전 낭독 그리고 제27회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각 분야에서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온 분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내빈으로는 이현종 군수, 한종문 부의장, 강세용 군의원, 이미경 군의원, 이다은 군의원, 김정수 도의원, 정문걸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조재숙 한기호 국회의원 보좌관, 진익태 철원군 자원봉사센터장, 장춘집 김화농협 조합장, 안창훈 철원군 보훈단체협의회회장 등이 참석했다.



시상 내용을 살펴보면, (사)대한노인회 회장 표창장은 (사)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 철원읍 분회 김용덕 사무장, (사)대한노인회 철원군 지회장 표창장은 김부수 철원읍 화지8리 경로당 회장, 모범 노인 철원군수 표창장은 철원읍 이상우 씨, 철원읍 황태현 씨, 김화를 조민구 씨, 동송읍 구경호 씨, 서면 김영규 씨, 근남면 이영규 씨에게 수여됐으며 노인복지 기여자 철원군수 표창장은 갈말읍 조태식 씨, 동송읍 김순임 씨, 서면 김상단 씨, 근남면 최은정 씨에게 수여됐다.



이어서 임길호 철원군 지회장의 기념사가 진행됐다. 기념사에서 임길호 지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어르신들과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제27회 노인의 날을 맞아 가장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의 귀중한 보물이며 소중한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 우리에게 큰 영광과 가르침을 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을 기리며 여러분이 가지신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세대에 도움과 사랑을 주며 예술과 문화 역사의 가치를 전해 주셨습니다. 노인의 날은 여러분들께서 보낸 소중한 삶의 여정을 기리고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사회에 기여하고 계신다는 인정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현중 군수의 축사, 한종문 부의장의 축사, 김정수 도의원의 축사를 끝으로 기념식을 모두 끝마쳤다.

1부 기념식 순서를 마치고 2부에서는 제4회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진행됐다.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전에 제1회 강원도 경로당 실버트롯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차지한 바 있는 이 박사 이규송 씨의 축하공연이 펼쳐져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어서 축하공연으로 스포츠댄스, 화지4리, 이평8리, 장흥5리, 동송 노인대학의 축하공연, 대강당 한국무용, 화지 10리, 상노2리, 라인댄스 축하공연 이 차례로 펼쳐졌다. 그리고 대미 행사로 금은별 초대 가수 축하공연이 열려 이날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셔틀버스(shuttle bus)를 운영하여 읍면 지역별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행사장이 어르신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만원을 이루었으며, 각 경로당 별로 준비해서 발표한 프로그램들이 그동안 강사 선생님과 어르신들이 큰 노력을 들여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어르신들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하였고 떡과 기념 수건을 마련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일일이 나누어 주는 소박한 정성을 나타내 보여 진정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였다고 많은 느낌을 느끼게 충분하였다.

이번 행사는 철원군이 주최하였으며 (사)대한노인회 철원군지회가 주관하였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8 ()

10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 속초시 영광초, 온정초등학교에서 열리는 각 학교 총동문회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9 28 ()

10



박호균(강릉) 도의원은 10월 3일 오전 11시 강릉구정초등학교에서 열리는 제15회 구정면민 한마음축제에 참석해 주민들과 교류한다.

2023 10 04 ()

江原日報

01

무상교복·친환경 급식 지자체 지원금 끊길 판

‘역대 최대 세수 결손’ 후폭풍
교육청 협력사업 예산도 불똥
강원특별자치도, 도교육청에
‘분담 비율 조정하자’ 공식요청
교육청 “사업 중단은 없을 것”

중·고교 교복 및 원어민 강사 지원 등 강원특별자치도 및 도내 18개 시·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 실시해 온 교육협력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여파로 각 지자체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서면서 교육 예산 줄이기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최근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중·고교 교복 지원, 원어민 강사비 지원 등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는 의견을 도교육청에 공식 전달했다.

도를 비롯한 시·군의 교부세가 1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자 지자체별로 도교육청과 함께 진행했던 협력사업에 대한 예산 감축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는 지

역 교육 발전 및 복지 차원에서 중·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 원어민 강사비 지원, 친환경 급식비 지원사업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교부세 감소 여파로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해당 예산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강원도가 교육청 협력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385억원, 시·군 부담액까지 합하면 720억원 규모다.

도교육청도 난감한 처지다.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육청이 받아야 할 교부금 역시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이다. 현재 도교육청은 올해 예상했던 교부금 3조6,000억원 가운데 5,200억원가량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3,200억원 정도의 교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협력사업 예산 분담률을 놓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줄다리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도교육청은 자체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이를 일부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선영기자

3면에 계속

江原日報

2023 10 04 ()

03

무상교복 지자체 지원 끊길 판
-1면에서 계속

해당 사안은 이르면 이달 말 강원도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 논의된다.

이와 별개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해야 하는 법정 전출금은 올해 380억원, 내년 4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도교육청은 “그나마 안정화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해야 할 사업을 못하게 되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경호 교육감은 “현재 대두되고 있는 사업이 원어민강사 지원 사업과 급식, 교복 지원 등 세 가지 정도인데 다각적으로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목소리를 낼 예정”이라고 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4 ()

02

‘황금연휴 호재’ 산림엑스포 관람객 42만명 돌파 흥행몰이

연휴 옛새간 33만여명 방문
목표 관람객 조기 달성 기대감
도·조직위 안전·위생관리 강화
미디어아트 등 체험시설 인기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누적 관람객이 42만 명을 돌파하며 연일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 옛새동안(9월 28일~10월 3일) 33만 여명이 산림엑스포장을 방문한 가운데 이들 관람객들은 기관·단체가 아닌 개인관람객이라는 점에서 강원세계산림엑스포 목표 관람객 132만명 조기 달성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는 3일 오후 6시 기준, 누적 관람객이 42만 65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누적 관람객은 개막 이후 첫 주말(9월 23~24일) 5만 3299명을 시작으로 추석 연휴기간 33만여명이 몰려 급증했다. 일일 관람객은 추석 연휴 첫날 28일 2만 6061명에서 △29일 6만 1943명 △30

일 7만 3887명 △10월 1일 7만 5716명으로 연일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밖에 2일 5만 7018명, 3일 4만 1654명이 찾았다. 연휴 옛새 동안 관람객은 33만 6279명으로 누적 관람객의 78%다.

전 세계 최초로 열고 있는 강원세계산림엑스포는 조기 흥행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지난 1일, 김진태 지사는 산림엑스포장을 찾아 연휴 중 비상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김 지사는 전국에서 몰려온 관람객들을 맞으며 엑스포 홍보에 집중했다. 대회 운영 파행 등 전북 새만금 정비 사태 논란이 컸던 직후 개최되는 국제대회라는 점에서 각계의 이목이 쏠렸던 가운데 강원특별자치도와 산림엑스포 조직위는 쾌적하고 안전한 행사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메인행사장인 고성군 세계잼버리수련장에는 경찰과 소방, 보건 인력이 상시 대기하며 안전을 강화하고 있다. 또, 20개 이동식 화장실이 추가 설치돼 전담 인력이 관리하는 등 위생 분야도 한층 강화됐다.

체험 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시민들이 2023 강원세계산림엑스포 상설전시관인 푸른지구관을 관람하고 있다.

시민재광-강원세계산림엑스포 조직위

푸른지구관에서 상영하는 대형 미디어아트 영상은 관람객들을 몰입시키며 '탄소 1t=나무 360그루', '대한민국은 경제성장과 산림복원을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기후위기 시대, 산림의 가치를 확산하고

있다. 산림엑스포장의 랜드마크인 숲방울 전망대를 비롯해 각 체험 시설 등에도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공연과 학술 행사 등도 이어진다. 4일에는 제17회 전국 숲해설 경연대회와 '엠디바'의 팝페라 공연, 강릉실

버악단의 클래식 공연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또, 강원세계산림엑스포와 국제 PEN한국본부는 5-6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문학, 산림을 노래하다'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덕형 duckbro@kado.net

江原日報

2023 10 04 ()

05

감사원 “딸 취업위해 채용 늘려” 검찰에 전 평창군수 수사 요청

감사원이 한왕기 전 평창군수의 딸을 취업시키기 위해 평창군이 공무원 채용인원을 2배 이상 늘렸다고 검찰에 한 전 군수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평창군 A과장은 2021년 2월 당초 9급 일반행정직 공무원 20명(일반모집 15명, 장애인·저소득층 5명)을 선발하겠다고 강원도에 신규공무원 총원 계획을 전달했지만 원서 접수 마감인 지난 5월 5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모집 선발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35명으로 두 배 넘게 늘렸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한 전 군수가 A 과장에게 “최대한으로 많이 뽑아라”, “평소에 결원이 없더라도 많이 뽑아 놓고 결원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채울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라”는 등 채용 인원 확대를 부당하게 지시했다고 봤다. 또 자기 딸이 시험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 과장의 뒤늦은 증원 계획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군수 딸은 일반모집 31위에 올랐다. 기존 선발 예정 인원인 15명으로는 합격할 수 없었지만, 변경된 35명에는 포함돼 최종 합격했다.

평창군 B 과장은 31위로 합격한 한 전 군수의 딸이 결원 범위 6명을 넘어 바로 임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인사부서에 임용후보자 전원을 대기 없이 바로 임용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국민의힘 강원자치도당은 지난 2일 논평을 내고 “감사원 공직비리 기동감찰 보고서에 적시된 혐의는 (한 전 군수가) 자신의 딸을 9급 공무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정원을 최초 선발 예정 인원보다 2배 이상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라며 “한심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상원기자**

2023 10 04 ()

강원도민일보

10

원주시, 전국적 재정위기 돌파 고삐 당긴다

지방교부세 928억원 감액 예상 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활용 국비확보 추진단 적극 운영 예산 구조조정 등 선제적 대응

원주시가 국비 지원 감소로 우려되는 전국적 재정 위기에 대응해 과감한 세출 구조 조정,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재적소 예산 지출 등 허리띠를 강

하게 죄다. 정부 국세 수입이 최근 당초 예산 대비 59조원 이상 부족할 것으로 나타나서, 전국적으로 세수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주의 경우 총 928억 원 감액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재정 위기 우려 상황을 사전 감지, 미리 올해 제2회 추경 예산에 지방교부세를 270억원 보수적으로 편성 대비했다. 또 순세계잉여금과 긴급재정 상황을 대비해 조성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 당

해연도 재원을 보전키로 했다. 이어 올 하반기 정리 추경에서 세출 예산 구조 조정을 실시하고, 이월 예산은 제한하는 등 재정 출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2024년도 사업을 재점검해 사업 간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하는 등 효율적 예산 편성에 나설 방침이다. 여기에 앞서 구성된 국비확보추진단을 통해 매달 1회 이상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세종방문의날(국비확

보의 날)'을 보다 활발히 운영, 미래 핵심 동력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 국비 확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재정 안정을 위한 고삐는 최대한 강하게 당기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동시에 건강, 안전, 복지 등 시민이 직접 체감하는 분야도 부족함 없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태욱 tae92@kado.net

2023 10 04 ()

강원도민일보

13

평창 천만송이 백일홍축제 10만명 방문 호평

평창강변 6만여㎡ 가을꽃 만끽 국악공연·향토먹거리 등 호응

지난 9월 22일 개막한 올해 평창 백일홍축제가 3일 관광객 10만여명(주최측 추산)이 방문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평창읍 종부리 평창강변 6만 5000여㎡에 조성된 천만송이 백일홍 꽃밭을 배경으로 펼쳐진 올해 축제는 백일홍과 황화코스모스 단지를 비롯, 축제장을 따라 400m 길이에 조성한 농산물 터널에 조롱박과 미니 굴호박, 뽕호박, 능소화 등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 축제장의 백일홍은 대표 색상인 붉은 색을 비롯해 화이트, 오렌지, 핑크 등 다채로운 색상의 꽃을 구역별로 구분해 심고 축제장 마지막 구간에는 대왕참나무 숲을 조성, 특



올해 평창백일홍축제가 지난 3일 관광객 10만여명이 방문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추석연휴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백일홍을 감상하고 있다. 신현태

색있는 꽃구경으로 관광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축제장에서 평창강 제방을 따라 왕복하는 백일홍강통열차가 매일 운행했고 백일홍포토존에서는 캐리커처, 풍선아트, 반려견피크닉존, 바위

술전시장 등을 운영,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축제장 입구에는 지역농특산물과 전국의 특산품을 접해 볼 수 있는 야시장이 운영됐고 먹거리마당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향토음식점들이 입점해 특색있고 맛있는 향토먹거리를 맛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백일홍사진전과 평창예술제가 열려 다양한 공연과 함께 한가위 노래자랑, 백일홍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열렸고 지난 27일에는 강원도민일보 주최 '아리랑 페스티벌인 평창'이 열려 천만송이 백일홍을 배경으로 대한민국 3대 아리랑과 퓨전아리랑으로 구성된 풍성한 국악공연을 감상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김형진 축제위원장은 "올해 계속된 폭염과 잦은 비로 풍성한 백일홍을 가꾸는데 어려움이 많았으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감사드립니다"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백일홍 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해 더 나은 축제로 발전시켜 가겠다"고 말했다. 신현태 sht9204@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10 04 ()

14

횡성한우축제 규모·프로그램 '업그레이드'

6일 개막 준비 '전환의 해' 선포
주무대 확장 상권활성화 극대화
오마카세 코스 '미식파티' 운영



제19회 횡성한우축제의 주무대인 문화체육로에 횡성한우 구이터가 3일 설치를 마치고 축제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제19회 횡성한우축제가 열리는 주무대가 기존 종합운동장 뿐 아니라 문화체육로까지 확장 조성되는 등 대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횡성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재성)은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횡성의 인심! 한우의 자부심!'을 주제로 제19회 횡성한우축제를 개최하는 가운데 최근 추석연휴 기간 행사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개막 준비에 들어갔다. 특히 올해 축제는 기존 연예인 공연과 한우 판매 중심 축제에서 탈피해 축제장을 기존 운동장에서 문화체육로 일원까지 확대해 횡성한우 판

매 단체만이 아닌 지역 상권 전체가 축제의 경제적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축제는 횡성한우를 고기가 아닌 문화로 접근하게 되는 '전환의 해'로 선포하고 축제 대표 프로그램으로 횡성한우 구이난장, 횡성한우 미식파티, 횡성한우 판타지아, 횡성한우 에코뮤지엄, 횡성한우 카우쇼, 횡성한우 웰니스파티를 준비했다.

무엇보다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횡성한우 미식파티'는 횡성한우를 오마카세 형태의 코스 요리로 즐기는 파티 프로그램으로 사랑하는 가족 또는 지인들과 모임으로 횡성한우를 특

별하게 경험하도록 했으며, 유명 셰프 에드워드권과 150만 유튜브버히밥의 음식 스토리텔링이 공연과 함께 진행된다.

또한 올해 축제는 최초로 구이터와 판매장을 분리해 축제 방문객들은 한 자리에서 횡성한우 생산단체 3곳의 상품을 만나볼 수 있고, 구이터에서는 1일 4회 '횡성한우 구이난장' 떼창 공연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이재성 대표이사는 "제19회 횡성한우축제에서의 판매장은 '횡성의 인심'을, 구이터는 문화공간으로 '횡성한우의 자부심'으로 표현하는 등 축제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현철

강원도민일보

2023 10 04 ()

/ 19

내년 사업 민생에 활력 중점을

-지자체 신규·중점 시책 신중한 결정으로

2024년도 당초예산안 수립 막바지에 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고심이 큼니다. 큰 폭의 세수 결손으로 내년 살림살이에 비상이 걸리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 선정에 어려움이 커졌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인상 지원 약속마저 지켜지지 않으면서 지자체 부담이 가중됐기에 시군마다 대책 마련에 더 근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수록 내년도 시책사업 및 주요사업은 치열한 탐구와 검증 거쳐 민생에 활력을 주는 결정이어야 할 것입니다. 연례적인 지출에 대한 일률적인 감액 조정과 지자체장 공약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시책은 실효적이어야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 여건과 요구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전략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우선 인구가 줄고 농촌이 다수인 도내에서는 자립적인 농촌형 경제 활성화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정주여건이 중시되면서 농촌에서 생활권 중심 및 마을 단위 균형 발전이 중요해졌습니다.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해 노후한 인프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교류인구 및 관계

인구 확대까지 고려한 시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실용적으로 적용돼 실현될지 따져야 합니다. 지역경제 버팀목인 소상공인 지원책의 경우 근래 유통 및 물류 환경 변화로 인해 e-비즈니스 마케팅이 관건이 됐습니다. 비대면 소비 수요 확대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는 e-비즈니스 촉진으로 경영 전략을 다변화하고, 구직자기 대처에 맞지 않는 근로 조건으로 인해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고민 해소에 지자체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자체 공무원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지역사회 변화를 불러오려면 여러 주체 참여가 충분하게 포함돼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방행정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주민공동체, 민간조직, 현장 활동가 등 여러 주체가 골고루 참여하는 방안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세대와 미래세대 요구에는 다양성이 있는 만큼 차별성에 맞게 부응해야 합니다. 환경 변화와 시대 상황이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안이한 시책은 예산만 낭비할 뿐입니다. 신규 및 중점 사업의 철저한 검증은 다름 아닌 철저한 주민 소통과 일하는 공무원 자세에 기반하고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10 04 ()

/ 19

동해항 자유무역지구 지정돼야

-북방교역전진기지 해양관광거점기대

동해항을 국제 무역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강원특별법 특례에 포함된 동해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동해시의 산업 정체성을 확립하고 장기적인 도시발전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북방교역의 전진기지 역할과 해양관광의 이정표를 만들 기회입니다. 도와 동해시는 무역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동해항을 환동해권 교류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동해시는 개정된 법률에 맞춰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2억원을 투입, 내년 4월까지 동해항·배후단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용역에는 자유무역지역 위치·경계, 개발사업 시행자와 개발기간·방법, 기반 시설·입주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등 동해항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구상과 구체적 실행계획 등이 담깁니다. 특히 주요 추진 과제로 동해항 자유무역지역의 비전과 발전 가능성, 자유무역지역 지정 요청 배경과 지정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강원특별자

치도를 거쳐 산자부에 기본계획 및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를 제출,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동해시의 미래와 연결돼 있습니다. 동해항 일원이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통관 간소화, 무비자, 관세 유보, 항만 인프라 확충 등 무역환경이 개선돼 환동해권의 국제물류·비즈니스 거점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북방교역 연관 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입지 여건 개선, 기존 업종 전환, 투자유치 활성화 기반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특례 반영을 지속건의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포함됐습니다.

동해항의 발전은 이 지역만의 현안이 아닙니다. 국가 산업의 거점으로, 무역 규모를 키울 토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글로벌도시를 완성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해항을 중심으로 인근 삼척과 강릉 등 해안물류 벨트 조성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관심과 도·동해시의 노력이 동시에 전개되기를 바랍니다.

江原日報

2023 10 04 ()

/ 19

여야 민생 살리기, 말보다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추석 연휴가 끝났다. 오랜만에 가족, 친지를 만나 추석 명절을 함께 보낸 출향 인사들은 고향의 정을 한껏 느끼고 돌아왔을 것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 지역구를 둘러본 여야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들은 말은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었다고 한다. 물론 국회의 원이라면 그 정도의 얘기는 꼭 현지에 가서 직접 듣지 않아도 서민들의 사정을 모를 리 없고 몰라도 안 될 일이다. 경제가 살아야 일자리가 생기는 것은 상식이다. 특히 청년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는 소리는 이젠 진부할 정도다.

이번 추석 연휴는 무엇보다도 위기를 슬기롭게 관리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갖게 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대졸 취업 부진의 일차적인 원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신입 채용을 줄인 것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경영환경 변화로 기업들은 대부분 공채를 폐지하고 경력직 중심으로 채용 방식을 재편하고 있다. 신산업 기술이 중시되면서 전문대나 일반대 졸업자보다는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쓰는 기업 수요가 커진 점도 대졸자들의 취업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

취업 전선에서 낙오한 청년이 늘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1년 늦어지면 취업에 성공한 때보다 10년 동안 연평균 임금이 4~8% 낮아진다는 게 최근 한국개발연

구원(KDI)의 분석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2011년부터 10년 동안 일자리사업에만 150조원 넘게 지출했다. 그러고도 대졸 취업률이 개선되기는커녕 현상 유지도 버거운 지경이다. 지금의 고용 보조금 지급 방식이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지 못하고 인건비 절감용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여야는 이제 청년 고용의 질에 주목해야 한다. 고용 장려금, 직접일자리 지원 등 효과가 의문시되는 기존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해야 한다. 임금과 복지,

안전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도록 유도하고, 질 좋은 직장과 청년을 연결하도록 일자리사업 구조를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이런 구조조

경제를 살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때

“노동시장 유연화·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일자리 정책 방향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정 없이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정을 쓰고도 대졸 취업률은 바닥권을 맴도는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방향은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기업 인센티브 확대, 창업 활성화, 규제 개선 등으로 향해야 한다. 규제 완화로 기업을 살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야 한다. 정부와 여야는 청년들의 일자리 정책 기초부터 확 바뀔 것이다.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는 집값 폭등과 물가불안 해소도 시급한 과제다. 청년 대책은 실수요가 있는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사라진 사회에 미래가 있을 리 없다. 벼랑 끝에 내몰린 청년들이 생계용 단기알바에 허덕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10 04 ()

/ 19

2050년 도민 2명 중 1명 노인, 고령화 대책 마련해야

2050년에는 도민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일 것으로 전망됐다. 초고속 고령화의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올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65세 이상 인구는 35만5,000명으로 전체의 23.3%의 비중을 보였다. 이는 전남(25.5%), 경북(23.9%), 전북(23.4%)에 이어 전국 네 번째다. 도 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028년 45만4,000명으로 29.8%를 기록한 뒤 2050년에는 70만명으로 47.2%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고령화는 이미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생산 인구가 줄어들면서 성장 잠재력 저하, 고령 인구 부양으로 인한 복지 재정 부담 증가는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관론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공적연금 제도가 취약한 우리 상황을 감안할 때 노령층으로 편입되는 공포 역시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처분가능소득 기준 노인 빈곤율은 2021년 37.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고령화는 저출산과 맞물린 사안이다. 노인 인구는 늘고 있는데 청년들은 고향을 떠나고 출산율은 받쳐주지 않으니 사회의 노령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늙은 자치단체가 되고 있는 강원도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미 인구 절벽으로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는 감소하

고 있다. 활력은 찾아보기 어렵고 지역 소멸 위기는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대비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자칫 때를 놓치면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투입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과국을 맞을 수도 있다. 인구 변동의 과장은 하나의 영역에 머물지 않고 다른 영역들과 연쇄적으로 결합하면서 지역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와 지자체는 하루빨리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지역 존립을 지킬 백년대계를 세워야 한다.

초고령화사회가 되고 있는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들을 정부 재정을 통한 금전 수혜자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알하는 노인 시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의 대상자로 봐야 한다. 고령자 고용 정책을 통합해 효율을 올리고 노인 고용 확대를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필요하다. 일본의 노인 고용 프로그램인 실버인재센터는 좋은 본보기다. 고령화대응이 향후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결정한다는 엄중함을 갖고 실효성 높고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기간에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좋아지기 힘들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다. 긴 안목에서 노동력 확보와 성장률 유지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고령화 대책을 점검하기 바란다.